



육아정책개발센터 정책 세미나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일시 | 2008. 7. 24(목) 14:00

· 장소 |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KICCE

주최 : 육아정책개발센터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육아정책개발센터 정책 세미나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일시: 2008. 7. 24(목) 14:00

□ 장소: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14:00 ~ 14:30	등	록	
			사회 유희정 육아정책개발센터 기획조정연구실장
14:30 ~ 14:50	개회 및 인사말	이	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강영순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장
		좌장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14:50 ~ 15:10	발	표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15:10 ~ 16:10	지	정	토
		론	석호현 학춘유치원장
			이일주 공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혜순 인천초 병설유치원감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순)
16:10 ~ 16:40	질 의	응	답
	토	론	총
			합
16:40	폐	회	

차 례

주제발표: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 1

I. 추진 배경	4
II. 도입 방향	5
III.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탐색	6
IV. 유치원 전산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10
V. 기대 효과	12
VI. 향후 과제	12

토론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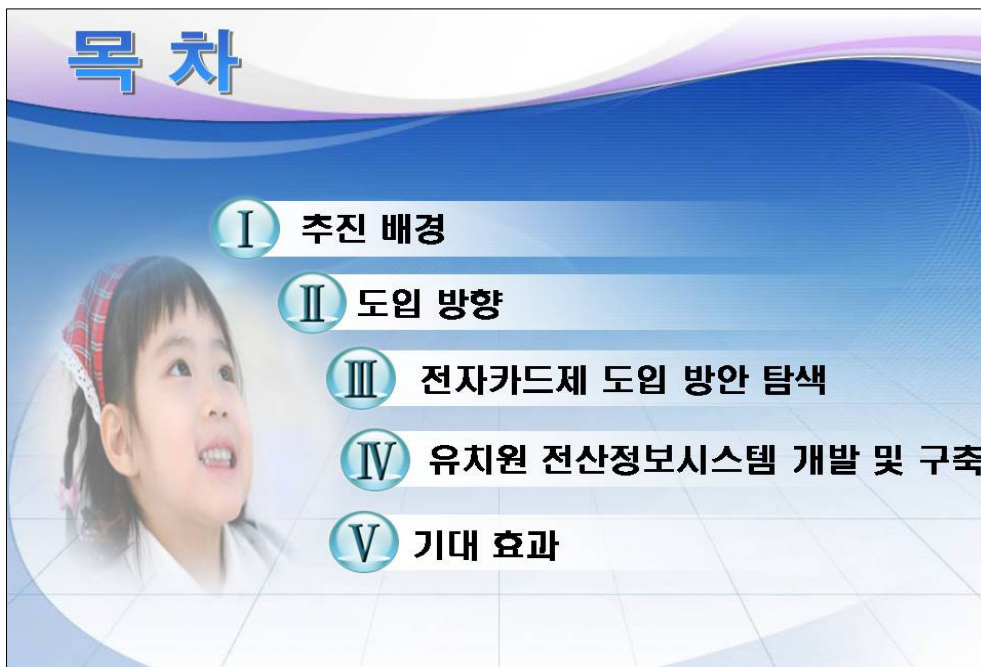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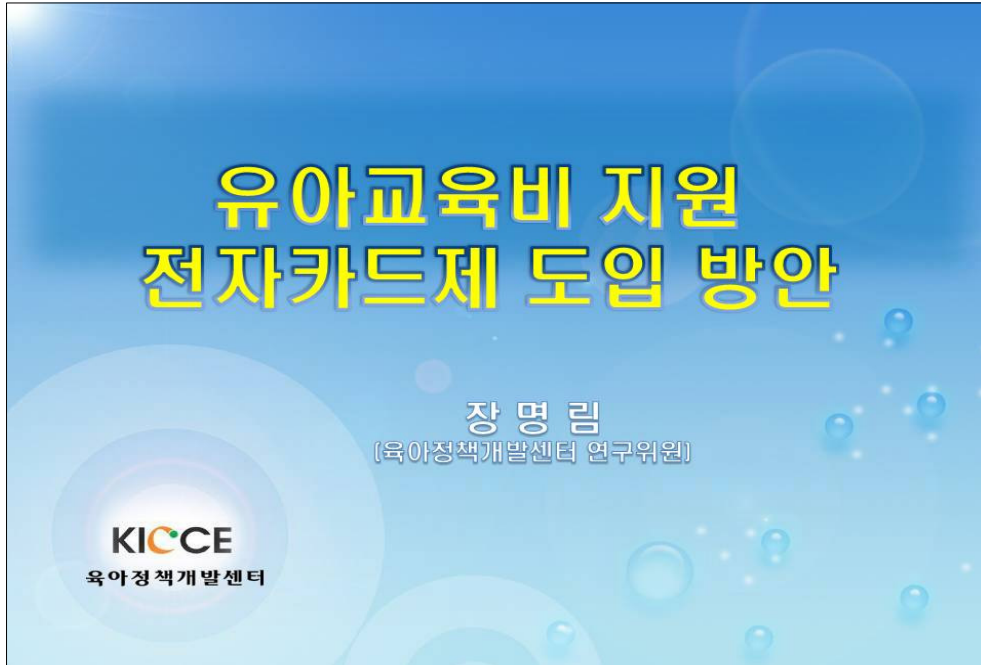
석호현(학춘유치원장)	15
이일주(공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9
이재원(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3
정혜순(신천초 병설유치원감)	37
조부경(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41

(이상 가나다순)

주제발표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장 명 림(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I. 추진 배경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국민 체감도 증진 필요

재정지원에 대한 국민체감도 증진

- 유아교육분야 정부 재정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정책체감도 증진

재정지출의 신뢰도 제고

-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막대한 유아 재정지출의 신뢰도 제고 및 사회적 합의 도모

유아교육 예산 증가

연도	예산액 (억원)
2003	256
2004	426
2005	971
2006	1,564
2007	2,171

I. 추진 배경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 체제 개편 필요

현재

정부 중심의 단선형 전달 체계

➔

개편

유치원과 학부모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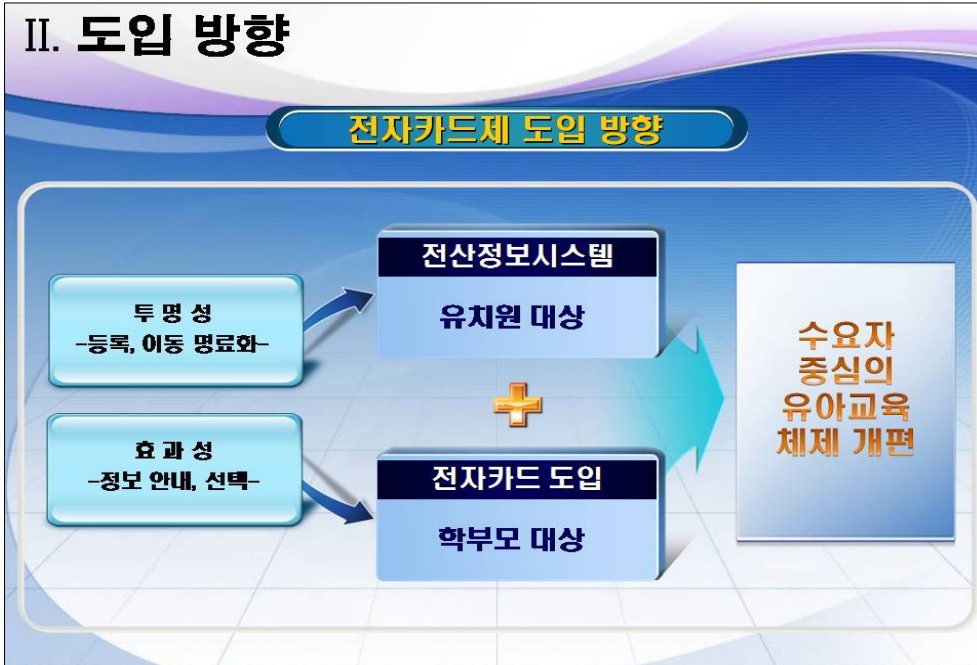
* 현재 단선형 전달체계 : 중앙정부 ⇄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유치원 ⇄ 학부모

유치원 정보 접근성 강화

전달 방식 개선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보장
[선택 및 변경 용이]

다양하고 질 좋은 유아교육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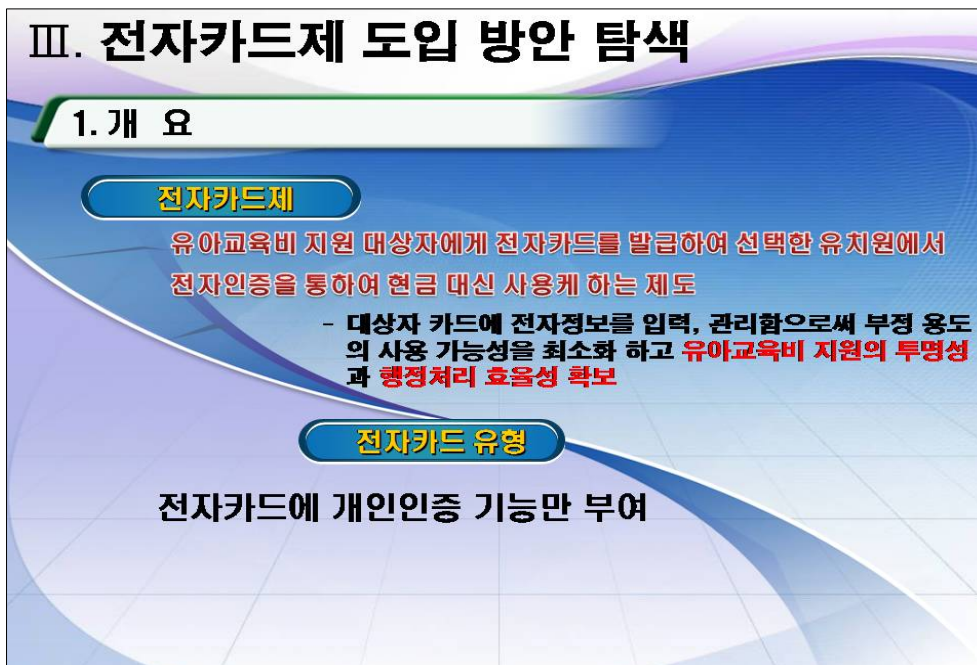
II. 도입 방향

재정 지원관련 전산시스템 마련

- 유아교육비를 직접 학부모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발급한 **전자카드**로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대상자 인증** (비용 지불에 상응)
-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 정보를 쉽게,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 구축

표준화된 결제 수단 도입

- 신용카드 형식의 **재정관리 전산화**로 카드사용 여부, 기관 이용 현황, 변동 상황 등 **서비스 이용 전반 파악 용이**
- 상호 인증시스템의 전용 단말기 사용으로 행정업무 경감, 비용지불과 정산에 관련된 **관리비용 절감**



Ⅲ.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탐색

개인 인증 기능을 통한 확인 방식

카드 내에 개인 정보만을 등록하여 지원 대상 여부 내용을 확인한 후 계좌 이체하는 방식 (예시 : 구 공무원 초과근무 확인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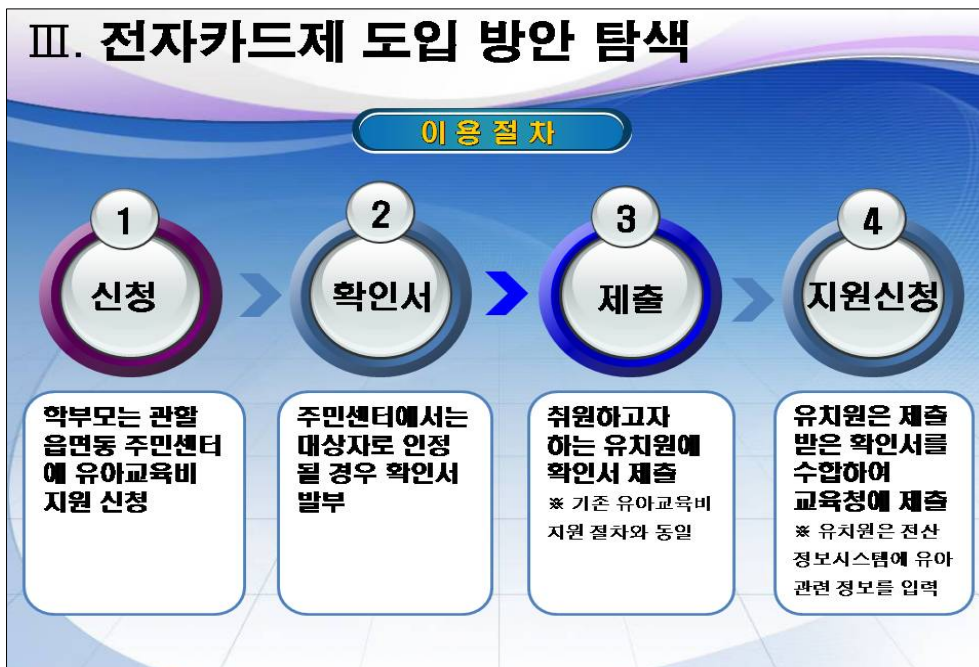
	국민 입장(학부모)	행정 편의(정부 및 기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정부 지원 사항의 확인 가능 ▶ 별도의 결제 계좌 개설 불필요 ▶ 분실시 타인의 오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여부 확인 용이 ▶ 전산시스템 이외의 별도 시스템이 불필요하며 수수료 미발생으로 재정 부담 해소
단점	▶ 교육비 인증 위한 카드 추가 보유·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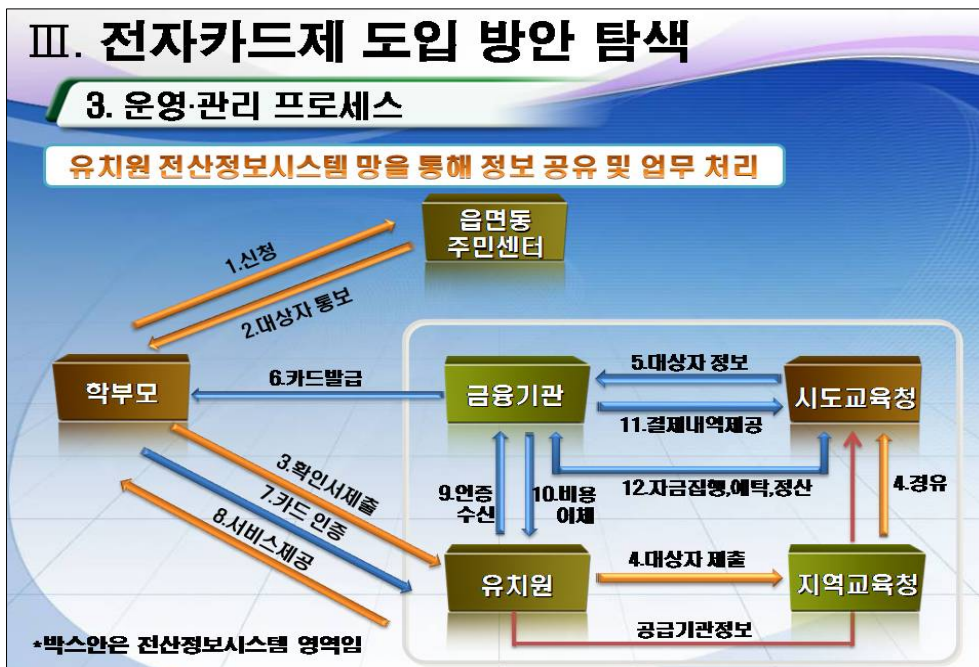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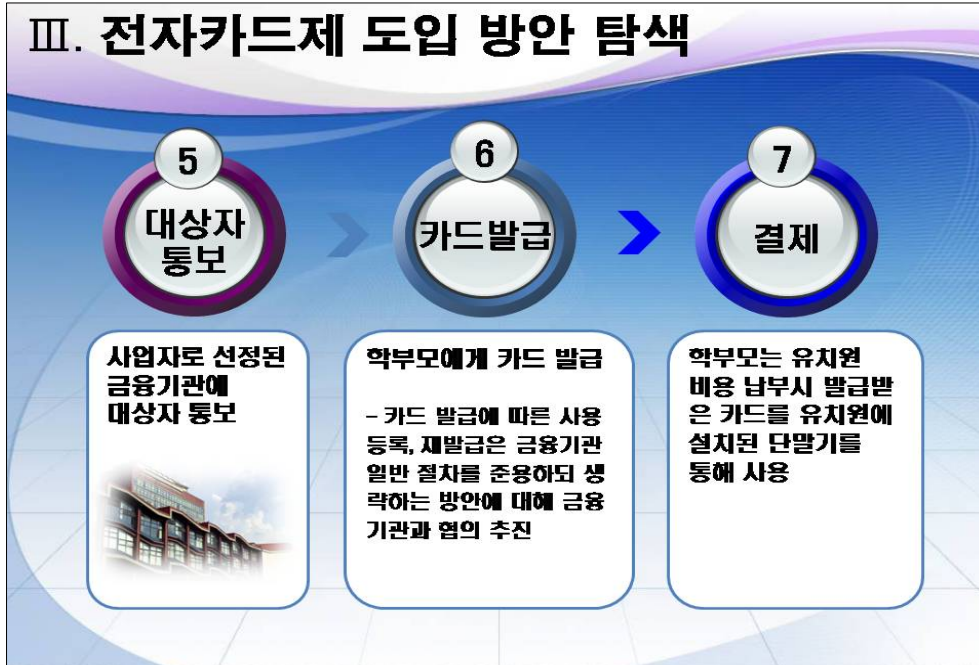
Ⅲ.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탐색

개인 인증카드 기능만 도입

검토사항

- 1 개인 인증기능만 보유한 교육비 전용 카드로서 기관 이용 여부를 확인 후 금융기관 - 유치원간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원
- 2 학부모는 교육비 전용 카드 보유, 기관 선택권 보장, 지원 체감도 증진
- 3 정부 및 기관측은 목적 외 사용 방지, 기타 수수료 등 재정부담 최소화





Ⅲ.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탐색

3. 운영·관리 프로세스

- 1단계**
 - 전자카드 대상자 관리
 - 신청 → 확인서(소득기준) → 대상자 통보 및 전산입력
- 2단계**
 - 전자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비용 지급
 - 전자카드 발급 → 서비스 이용 및 정보처리 → 비용 지급
- 3단계**
 - 자금 집행 및 관리
 - 자금 예탁(시도교육청 → 금융기관)
 - 결제 내역 확인(금융기관 → 지급정산)

대상자 관리, 서비스 이용, 비용 지급 등 『전자카드 관리의 효율화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 금융기관 선정 및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Ⅳ. 유치원 전산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1 ▶ 시스템 구축 방향

- 전자카드 사용에 따른 금융결제시스템과 연계한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에서 활용할 **기초 통계시스템 구축**
 - 보조금 이종청구 방지, 효율적 예산관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정보 입력 및 관리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 인프라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구축하고 중앙총괄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금융기관 공동 구축
- 응용S/W는 중앙에서 1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6개 시·도에 보급

IV. 유치원 전산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2 ▶ 주요 처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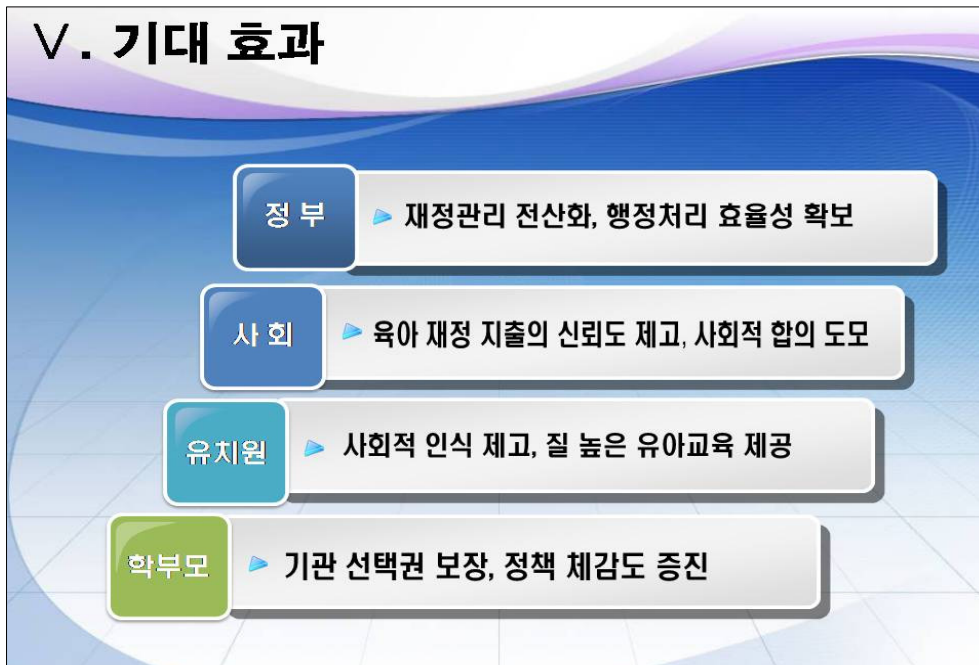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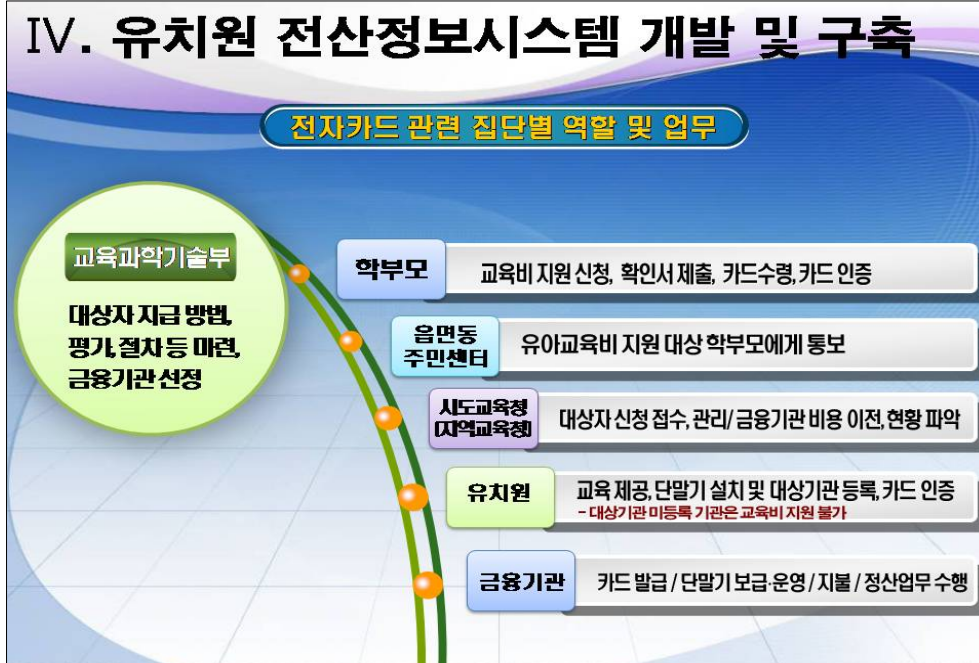
전자카드제 시행의 효율화에 필요한 최소 정보

유아 기본 인적사항	교육비 지원 현황	유치원 현황	건강·안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 등록,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 카드제 등 연 정부교육비 지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명, 원장명, 설립유형, 지역, 학급수, 연역 등 교사의 수, 자격, 직위 등 영양사, 조리사, 기타 인력 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및 영양 관리 현황 안전시설·안전점검, 실내외 환경 점검, 화재 안전점검횟수, 점검사항 등 협력 기관 연계연용 (병원, 보건소, 소방서, 경찰 등)

IV. 유치원 전산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3 ▶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통계 처리 및 교육비 사용 확인	금융전산망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아, 시설 등 각종 유치원 현황, 시도교육청 또는 전국적인 통계 파악 교육비 지원 현황 및 취원아 대비 교육비 수혜인원, 수혜율을 익일, 분기별, 연도별, 지역별, 지역유형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전산망과 연계되어 교육비 지원 대상자 정보 공유 교육비 지원에 따른 자금 청산 



토론

석 호 현(학촌유치원장)

이 일 주(공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 재 원(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 혜 손(신천초 병설유치원감)

조 부 경(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전자카드 도입은 교육발전의 큰 틀에서 사립 유치원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석호현 학춘유치원장

바우처제도란 미국에서 국가 공적기관이 사립학교의 수업료 지원을 보증하는 제도로써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그동안 국가는 유아교육 서비스(지원)에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정책 당국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공급자 중심과 정책 편의적 차원에서 실시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첨단 시스템 발전에 걸맞게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전자 바우처라는 제도적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 1) 수요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 2) 수요자의 시설 선택권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성과를 높이며
- 3)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에게도 혜택이 고르게 배분되고
- 4) 지도감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제도적 변화의 장점으로 유아지원 서비스의 포커스를 교육 경쟁력과 지원의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에 맞추고 있다.

또한 일부 사립 공급자(시설자) 차원에서는 변화에 대한 심리적 우려는 물론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원아모집 및 경영상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관리 감독에 대한 불신과 국공립 유치원과의 현저한 지원 격차와 사립 유치원의 열악한 교육시설 및 재정적 어려움에서 예상되는 우려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 1) 수요자 선택권의 확대로 기초교육 지원 본연의 뜻과는 달리 사설강습에 의한 원아 이동
- 2)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의 교육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 및 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 3) 개인정보의 유출 및 운영자의 자료노출로 인한 관리 감독의 발미제공 등

과거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과 행정 편의적인 사고에서 사립 유치원 시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경쟁력만을 강조한 시기상조적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규범과 제도의 변화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여론의 객관성이 상실될 때 제기되며 유아 서비스의 국가적 지원과 제도적 변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의 개혁이나 정책도 모두를 함께 만족 할 수는 없으며, 유아 복지, 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 역시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정책 관리 기관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때문에 정책의 기초는 집단 개개인의 이해를 넘어

- 1) 교육발전을 위한 취지가 분명해야 하며,
- 2) 공익적이어야 하며,
- 3) 사회와 국가적 발전에 기초해야 하며,
- 4) 객관적 여론에 합리적이어야 한다.

특히 교육 지원 정책은 교육 발전이라는 명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제도와 정책은 정치적 논리일 수 없으며 경제적 논리일 수도 없고 집단 이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어서는 더욱 더 안 된다.

사립 유치원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제공하고 교육의 시작, 출발 단계로 유아의 건전한 사고와 정서 발달에 중요한 시기로서 어떠한 정책이나 여론도 교육 발전이라는 큰 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사립 유치원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직 투철한 국가관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재정운영에서도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립 유치원은 작은 이해관계에서 교육의 큰 틀을 저버리지 않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립, 자존의 정신을 이어 왔다.

교육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이어가야 하고 국가와 지역 사회는 지원과 관심을 통해 유아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의 어린 꿈나무들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투명하고 올바른 관리 감독 하에서의 순수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의 우려와 문제점인 전자 바우처제도의 본질 상실, 유아 교육 지원카드라는 범위를 넘어선 특별 교육 소위 사설 학원 지원, 카드수수료에 대한 대책마련, 전자카드기 무상지원 등 열악한 사립 유치원의 재정적 고려와 원아모집이라는 난제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전자 바우처제도는 비판적 여론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때문에 우리 사립 유치원에서는 유아 전자교육바우처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건의한다. 이제 전자교육 전용카드 지원제도는 시대의 흐름이고 요청이며 유·불리와 시행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이다.

최소한의 시설의 충격을 완화하고 진정한 교육과 유아 서비스제도가 정착되도록 충분한 시간과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

이일주 공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I. 시작하면서

최근에 와서 유아교육비 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이후 이미 보육시설에 대한 전자바우처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며, 토론자는 오늘의 토론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보육시설에 대한 전자바우처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본질적인 찬반 논란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론자는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본 후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를 밝혀 본다.

II. 발표 내용의 요지

장명림 박사께서는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 카드제의 도입 추진 배경과 목표를 제

시한 후 3가지 유형의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과 유치원 전산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 카드제의 도입 추진 배경과 목표

장명림 박사께서는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 카드제의 도입 추진 배경으로 ‘유아교육·보육 분야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체제 개편’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재정지원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 이원화, 전달체계 전산화 미비로 인한 업무 중복 및 재정 비효율성 해소 필요”가 있으며, “유·보 통합적 차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달체계 구축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아학비 지원체계를 우선 개선”하는 한편, “정부 중심의 단선형 전달체계에서 유치원과 학부모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재정지출의 신뢰도 제고 및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며 “유치원 정보 접근성 강화, 전달 방식 개선 등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목표로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산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학부모가 전자카드로 유아학비를 지불케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유치원 정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제에 의한 표준화된 결제 수단을 도입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2. 전자카드제 도입방안

장명림 박사께서는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을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방안별로 국민의 입장과 정부 및 기관의 행정 편의 면에서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였다.

1) 1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 방식

이 방식은 “은행 간 국제 금융 결제망을 통하여 신용거래 및 대금을 지불하며 신용카드는 사후 정산, 체크카드는 사전 입금 후 신용 거래”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 수준(개인 인증을 포함)에 의한 카드발급과 개인 계좌 개설을 통한 비용 처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서, 만일 이 방식을 택할 경우 학부모는 한 장의 전자카드

로 유치원교육비도 납입하고, 신용거래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간 40~6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수수료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별도 계좌 개설, 카드 도난시의 문제 등의 단점이 있다.

2) 2안: 마일리지, 포인트 지급 방식

이 방식은 “정부지원을 금융 거래상의 다른 거래 단위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사용 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정부 지원 사항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1안과 마찬가지로 전담 금융기관의 카드 및 계좌 개설로 인한 불평과 수수료 발생의 문제점이 있다.

3) 3안: 개인 인증 전자카드 활용 방식

발표 내용에 의하면 이 방식은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여부 확인용이”, “별도의 결제 계좌 개설 불필요” 및 “전산시스템 이외의 별도 시스템이 불필요하며 수수료 미발생으로 재정 부담 해소”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학부모가 “학비 지급 외 신용거래 등 기타 목적 활용 불가”하다는 단점 외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고 있다.

3. 카드 발급 및 이용절차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학부모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는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확인서를 발부하고, 학부모가 이를 취원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확인서를 제출한다. 유치원은 지원 대상 유아관련 정보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제출받은 확인서를 수합하여 교육청에 제출함으로써 지원 신청이 이루어진다.

교육청은 지원대상자를 전자 카드 시행사업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상자를 통보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학부모에게 카드를 발급한다.

학부모는 유치원 비용 납부시 이 카드를 이용하여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사용하는데,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액은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유치원 전산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전자카드 사용에 따른 금융결제시스템과 연계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활용할 기초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시스템에는 보조금 이중청구 방지, 효율적 예산관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아 기본 인적사항’, ‘교육비 지원 현황’, ‘유치원 현황’, ‘시설 현황’, ‘건강·안전 현황’ 등 5개 분야의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한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 인프라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구축하고, 중앙총괄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금융기관이 공동 구축하며, 응용S/W는 중앙에서 1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6개 시·도에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전자카드와 관련된 기관·집단별 역할 및 업무에 관하여는 발표 내용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5. 향후 추진과제

발표 내용에 의하면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사업계획 수립 및 부처 협의, 금융기관 및 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개발’, ‘시범 운용’, ‘시·도교육청 담당자 시스템 연수(전자카드, 정보시스템)’등을 들고 있는데, 그 과제 수행시기와 전자카드제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III. 토론자의 견해

1. 전자카드제는 필요한가?

발표 내용과 같이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는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선택한 유치원에서 현금 대신 사용케 하는 제도”로, 전자카드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관리함으로써 부정사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유아교육비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교통수단 이용, 금융 및 신용거래, 상품 구입, 각종 바우처 수혜, 방법

시스템 활용 등 이미 전자 카드가 없이는 하루라도 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전자카드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2008년 7월부터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유 종이바우처제도가 전자카드제로 변경되었고, 이미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절차를 거쳤으며, 강원도 다자녀 가족 우대카드제가 시행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나친 사행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마에도 실명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를 보면 최근의 한국사회는 전자카드 만능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전자카드를 대중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여 유아교육비 지원 관리도 전자카드로 하면 여러 정책 목표를 일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등 전자카드는 여러 방식 중 수요자가 전자카드를 선택한 것이지만,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는 만일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명시적바우처 방식은 폐기되므로 유아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인 유치원은 바우처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의 전자카드는 시장경제에 의하여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발명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유아교육비 지원 관리를 위한 전자카드제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2008년 2월에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보육체제 개편’이라는 국정과제(3-2-3)를 확정함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학부모나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으면 도입하기 어렵다.

2.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은가?

전자카드제는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에게 제공하는 바우처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바우처이므로 ‘명시적 바우처’ 또는 ‘수요자 바우처’라고도 한다. 명시적 바우처는 보통 쿠폰(coupons)이나 카드(card)를 수요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전자카드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전자카드제의 구체적인 유형은 장명립 박사께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 즉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체크카드)[1안], 마일리지, 포인트 지급 방식[2안], 개인 인증

전자카드 활용 방식[3안]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1안과 2안은 수수료 발생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과 전담 금융기관의 카드 및 계좌 개설로 인한 불편 등 장점보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전자카드 도입초기부터 실행하는 것은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으로 전자카드제를 선택한다면 3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발제 내용에 의하면 3안의 개인 인증카드(스마트카드)를 적용할 경우 수혜자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도 없고,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여부 확인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 이외의 별도 시스템이 불필요하며, 수수료 미발생으로 재정 부담이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수요자가 학비 지급 외 신용거래 등 기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이 문제도 학부모가 동의하면 카드 내에 기타 신용거래 기능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토론자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발표 내용 ‘3. 운영·관리 프로세스’ 내용의 그림 <절차 흐름도>의 점선 안에 있는 자금 집행 및 비용이체 과정을 보면 시·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비 결제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면서 대상자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기관이 유치원에 비용을 이체하고 그 결제내역을 시·도교육청에 제공하고 정산하는 방식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비용이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곧바로 이체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유치원을 통해 인증수신이 이루어진 후 이체를 하는데 어떻게 하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토론자는 정부에서는 이미 금융기관과 수수료 없이 비용을 이체하는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만일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수수료를 유치원이 부담하든 정부가 부담하든 결국 유아교육재정의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과 유치원에게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3.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1) 학부모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금융결제시스템과 연계한 전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이 시스템 속에 유치원의 교육여건에 관한 주요 정보가 상세하게 입력되어 있으므로 집에서 가까우면서도, 우수한 교사진과 교육환경을 갖춘 안전한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유치원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교육비용 지원대상자의 이중 등록여부 확인 등 불필요한 잡무가 경감될 수 있고, 우수한 교사진과 교육환경을 갖춘 안전한 유치원이 경쟁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원아유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여건이 다소 불비한 유치원은 유치원평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유치원 교육의 질적 제고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유치원 예·결산 등 운영 사항이 전산정보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므로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게 된다.

3) 국가 및 시·도교육청

발표내용에 제시한 유치원 정보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유치원평가 항목과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서 유아교육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유치원 평가결과를 공개하면 굳이 전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유치원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은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보다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및 유치원 관리 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전자카드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1) 학부모 측면

현재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층에 따른 지원금이 자녀가 재원 중인 유치원으로 곧바로 납입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았지만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지원 대상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지원금을 납입하고, 추가 납부액은 유치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

한편, 도입 당시에는 전자카드에 유아의 등록 및 발달상황 등 인적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입력, 활용된다고 하지만, 추후에는 유아 및 학부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인적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액은 학부모가 유치원이 지정한 방식으로 별도 납부해야 하므로 전액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중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유치원 측면

수요자중심의 유아교육체제로의 개편 방향이 유치원간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학부모 요구를 무조건 반영하는 것이라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유치원이 많다고 본다. ‘학부모의 기관선택권’은 현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제고’에 있어서는 현재 유치원 원아모집, 유치원 평가 등을 통하여 선의의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전자카드제와 유치원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국·공립유치원은 이미 구축되어 있음)을 반대하는 명분이다.

이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정보 외의 목적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비 지원액의 차이가 계속되는 한 전자카드제 실시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2008년 기준 만5세 유아교육비 지원단가가 사립유치원은 167,000원인데, 국·공립유치원 지원단가는 55,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69%가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으며, 단지 31%만이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중일반을 선호하는데, 국·공립유치원 지원단가는 55,000원에는 중일반 수혜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배경이 “유아교육·보육 분야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하고 있는데, 종일제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균등하게 하지 않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제 도입이 가능하겠는가?

또한 사립유치원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산 정보시스템관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보시스템관리체제를 마련한다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권을 박

탈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학원에 유아교육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문제이다. 현행법으로는 2009년 2월까지만 유아대상 학원에 대한 교육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일 이 특례규정이 개정되어 기간을 더 연장하게 된다면 전자카드제 도입 범위가 학원까지 파급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3) 정부 및 관리 기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체계가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지원, 관리 감독하는 자치단체(광역, 기초)와 유치원을 관할하는 시·도교육청 간의 시스템공유가 가능하겠는가?

물론 전자카드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정부 간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지원액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는 유아교육비와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응재원을 조달하는 보육료지원금의 재원마련과 집행의 기관, 방식이 다른데 행정부처 및 자치단체(광역, 기초)와 시·도교육청 간 업무 통합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를 고려하여 보면 전자카드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4) 금융기관 측면

전자카드 발급비용과 단말기 제작 및 설치, 관리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없이 지원금 예치 이자만을 운용하여 전자카드 이용에 따른 유치원으로의 이체, 시·도교육청으로의 결제내역 제공, 카드 분실 시 재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만일 도입초기에는 수수료 없이 전자카드제가 도입되었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수수료를 정부 또는 유치원에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신뢰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5) 외국의 사례

영국에서는 1995년에 ‘유아교육 전국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1996년에 ‘유아교육과 학교교육 확대 법(Nursery Education and Grant-Maintained School Education

Act)’에 의하여 유아 1인당 1,100파운드(한화 약 200만원, 월 167,000원)의 유아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였다. 당시 영국의 바우처 방식은 명시적 바우처로서, 개별 유아에게 일 년치 52장을 한 묶음으로 지급하여 1주 당 1매씩 제공하였다. 이로써 지원대상자의 학부모는 일주일 단위로 유아학교 이동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 영국의 유아교육 바우처는 학부모의 추가 부담액이 과다하였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공·사립간 바우처 상환방법이 달라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고(공립유아학교는 바우처 외에 별도로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징수하지 못하게 함), 교육시설의 공급부족으로 공급자의 자의 선별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결국 영국의 유아교육 바우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3, 4세 아동(영국은 만5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함)에게 제공하는 유아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로 전환하였다(신은수, 2008).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보면 성급하게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전자카드제 도입의 선결과제는 무엇인가?

중국적으로는 유아교육의 완전 무상교육을 통한 공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유아교육정책의 목표이지만, 이는 그 실현 가능성으로 볼 때 장기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전자카드제 도입과 유치원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 확립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1) 정부부처의 전자카드 관리 체계의 단일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 배경은 ‘유아교육·보육 분야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건복지가족부와 자체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이 불가하다는 실증적인 예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유아교육 지원 전자카드제는 보육 전자바우처와 함께 정책조정·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실효성을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유아교육)와 보육정책위원회(보육)의 공동 개최를 통하여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통합센터(가칭 ‘중앙유아교육·보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전자카드 도입 로드맵의 설정

발표 내용에 의하면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는 적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다.

비공식적으로는 2009년 9월에 전자카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장명림 박사의 발표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현 상황으로서는 로드맵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에서는 앞으로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계속 추진 또는 유보를 결정토록 하고, 만일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청회, 시범운영 등을 거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교육비 균등화 실현

영국의 유아교육 바우처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교육비의 불균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려면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을 선택하든, 아니면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든 연령별, 계층별 교육비 지원액을 동일하게 책정해야 한다.

4)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실현

사립유치원의 측면에서 볼 때 전자카드제 도입과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안은 ‘지원 없이 감독만 하려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립유치원의 정책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보조금제도를 확대하여 사립유치원교사들의 보수(봉급 및 수당)지원계획을 함께 포함하여 추진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로 볼 때 당장 보수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학

급담임수당의 전국 확대와 교직수당만이라도 책정,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 폐지

한국에서 영·유아에 대한 바우처가 보육바우처 및 유아교육바우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4인 가족 기준소득이 월 3,705,000원 이하인 가정의 초등학교 취학 전(만 6세 이하)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월 25,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담금(5,000~23,000원)을 내면 교원 빨간펜, 웅진 썬크빅, 아이북랜드, 구몬 학습 등 8곳 기업에서 제공하는 학습지 중 하나를 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영미, 2008) ‘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바우처 방식은 동일 연령대의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바우처의 중복지원 우려가 있는 한편, 유치원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폐지하여야 한다.

6) 유아교육 서비스 기관 범주의 공식화: 학원 위탁 방식 폐지

학술적,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유아교육서비스 기관은 아무리 넓게 보아도 유치원과 보육시설 외에 더 포함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시설인 유아대상 학원에 유아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어 벌써 두 번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2009년 2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학원에 대한 지원이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IV. 마치면서

전자카드제를 통하여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시도와 유치원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아교육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표설정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 카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 장명림 박사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성과 기대 효과가 명료하

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당해 정책의 이해관련집단의 수용과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고려하여 볼 때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확대가 전제된다면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은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전자카드제는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도입의 전제가 선결될 때까지는 일시 유보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 고영미(2008),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유아교육에서의 통합: 그 의미와 실천, 2008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유아교육학회.
- 신은수(2008), 보육시설의 복지와 선택을 넘어선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 보육시설의 바우처제도 도입 연구(제2회 토론회 자료), 한국바른보육실천연대 · 김충환의원실.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방안” 토론 자료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위한 정책 묶음의 체계적 접근 필요

- 전자카드제는 유아교육비 지불 수단에 불과한 것임. 현재 유아교육비 지불·정산관련 행정업무를 고려할 때 새로운 전산급여 관리체계가 필요한지 여부가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론적으로 기대하는 만큼의 실질 효과가 없을 수 있음. 더욱이 현재 일선기관의 행정관리체계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도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전자카드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관리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음. 전자카드제를 이용하는 것과 부정사용 관리는 다른 차원의 정책임. 전자카드제에서도 부정사용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이 가능함.
- 수요자 중심 정책의 초점은 현재의 명목바우처 제도를 실질바우처 제도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재량과 선택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전자카드운영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서비스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정책구상도 병행되어야 함. 그런데, 정부지원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품질을 통한 제공기관의 경쟁이 발생하게 됨. 이러한 과정에서 과잉 경쟁에 따른 소비자 기만과 부실 교육(품질) 등과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아교육서비스 시장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함.
-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체계 개편”을 지향한다면 “실질바우처(종이 혹은

은 전자바우처)-품질관리체계-시장관리체계”가 한 묶음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는 기존 정책 접근을 대폭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요함.

○ 수요자 중심 방식과 전자카드제는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교육서비스에 바우처 방식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관 중심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토론회의 주제는 아닐 것임. 그런데, 이러한 쟁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전자카드제에 대한 필요이상의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수요자 중심 방식과 전자카드제는 관련 시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거나 단기간에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수요자 중심 방식은 공급자간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공급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 지역이 우선 적합할 것임. 도시지역에서는 체계적인 정책관리 접근이 모색된다면 공급기관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공급기관을 육성하기 보다는 시장 육성을 통한 공급기관 지원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급기관들에게는 교육 품질과 소비자 만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서의 수요자 중심 방식은 도시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되는 것임. 즉, 농어촌지역에서는 수요자들에게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정책 재량을 확대(가족의 직접 교육, 방문교육, 비공식 교육 등)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에서와 같이 승인된 공급기관의 선택 재량은 아님. 수요자 중심 방식에서 이러한 선택을 정책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자카드제와는 별개의 논의로 진행되어야 함.
- 신용카드방식의 전자카드제는 금융기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수요자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 금융기관을 다양하게 지정·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산운영 규모가 충분해야 하는데,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

예산 규모로서는 특정 금융기관에 국한될 가능성이 많아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적절히 활용되기 힘들 수 있음.

○ 전자카드와 관리시스템 운영 센터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영유아보육서비스를 지금의 명목바우처에서 전자바우처로 전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서비스는 상당 정도 서비스 대상에서 중복이 예상됨. 이 경우 소비자 중심 방식이라고 하면 이용자가 정책담당 부처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부처별로 다른 전자카드 방식을 이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공급자 방식에서는 부처별로 관할하는 제공기관이 구분되기 때문에 정책혼란의 문제는 없지만 수요자 방식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정책통합 운영이 필요함.
- 발표 자료에서 전자카드관리를 위한 중앙총괄센터에 대한 구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음. 전자카드제를 단순히 교육비의 지불 결제만을 위해 이용한다고 하면 장애인 LPG카드나 유류보조금 카드 등과 동일하게 설계하면 됨. 금융기관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앙총괄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
-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책접근을 위한 1단계 정책 수단으로 전자카드제를 추진한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총괄센터가 필요함. 센터에서는 서비스 공급기관 관리, 제공기관 및 소비자 민원관리, 전자카드 부정사용 방지 및 모니터링, 전산운영시스템관리, 유아교육 정책정보관리 등과 같은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함.
-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총괄센터를 운영하기에는 현재의 관련 예산규모가 크지 않아 비용-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음. 또한 소규모 예산으로는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정책관리 효과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유아보육정책과 정책연계를 통한 통합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총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더욱이 소규모 유사 정책에 별도의 관리 조직을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조직관리 철학과도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정책에 대한 기본 설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지만 전자카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이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운영하고 있는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경우 전자카드제 실시에 따른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부처 간 정책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 카드제 도입’에 대한 토론

정혜순 신천초 병설유치원감

1. 추진 배경

유아교육·보육 분야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체제 개편을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과연 전자카드제를 실시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소관부처가 이원화 되어 있고 업무 중복 및 재정 비효율성 해소가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의 문제와 정부부처간의 유아학비 지원체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쉽게 풀어나가려는 방식은 아닌지?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하며 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을 어떻게 제고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학부모의 기관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지 혹은 기관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앞서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 심지어는 미술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까지 167,000원을 지원하면서 국공립유치원에는 1/3 수준도 못되는 55,000원을 지원해주어 저소득층의 유아들의 선택권을 막는 것에 대한 방법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거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

거나 학부모의 기간 선택권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II. 도입 목표

재정 지원관련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유치원에 단말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전국 유치원 8,300여개의 단말기 값은 충당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 정보를 쉽게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굳이 전자카드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인가?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 교육과학부에 유치원 전산망을 갖출 용의는 없는지? 또한 표준화된 결재수단 도입이 과연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고 관리비용이 절감될 지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

III. 전자카드제 도입

1안과 2안은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재정 부담이 있고 3안의 경우에는(개인 인증기능을 통한 확인 방식) 수수료 미발생으로 인하여 재정 부담이 해소된다고 하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정부 방침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이나 바우처 전매의 문제 발생 등이 원천 방지될 지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카드발급 및 이용절차에서 기존 유아학비 지원 절차에 더불어 학부모의 부담이 더해진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전자카드제 도입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유치원 입장에서도 행정업무가 간소화되지 않고 더욱 불필요한 형식적인 절차가 더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IV. 유치원 전산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전자카드 사용에 대비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초 통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유치원에 대한 주요 처리 정보를 구축하고 난 후에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V. 맺으며...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첫째, 전자카드제 도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현지점에서 학부모들과 유치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명확하지 않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정책 대상자들에게 수용하게 하는 것은 신뢰면에서 문제가 있다.

셋째,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에 반드시 사설학원인 유아미술학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넷째, 설립별 차등지원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유아들에게 공평하고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인 유치원에 대한 기초통계시스템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 카드제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새 정부가 시작된 지 다섯 달이 지나는 지금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드러나는 양상으로는 수요자중심, 실용중심, 경쟁체제 강화 등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기조에 따라 유아교육정책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또한 실용과 효율을 중요시하는 새 정부의 기본방향을 따르기 위한 하나의 안으로 여겨진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하나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실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 분야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정책 목표 및 방향설정과 그에 따른 장, 단기적 실천 안 마련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전자카드제와 같은 세부 실천 안에 대한 논의 이전에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앞으로 5년간의 전체적인 큰 그림과 이를 위한 단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원론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유아교육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의 핵심은 교육비지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묵시적 바우처 형태를 명시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유치원 정보 접근의 용이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산정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전자바우처 제도와 그 맥을 같이하면서,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을 병행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발제 원고가 매우 요약적이기 때문에 본 토론자의 이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발제 내용의 순서대로 의문점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추진 배경 두 가지에 대한 논의

1. 유아교육보육 분야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분

발제자께서 제시한 업무중복 및 재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유보통합차원의 효율적이며 투명한 전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기본 입장 그 자체는 매우 적절하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문미옥, 2006;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한국유아교육학회, 2005, 2006, 2007), 행정체제가 통합되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재정 측면에서의 통합을 중심으로 나아가거나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통합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송기창, 2008; 이일주, 2008; 조부경, 2008)에서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방안, 특히 교육비지원체제 개선안이 전자카드제인지에는 의문이 생긴다. 현재 교육비지원체제에서의 문제가 묵시적 지원이었기 때문인가를 생각해 볼 때, 투명성 부분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교육비 지원을 카드로 하느냐, 지금과 같이 묵시적으로 하는가보다는 교육비 지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던 기본적인 필수적인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교육비 지원의 방향(보편적 지원이나 선택적 지원이나)과 지원범위(수업료지원이나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지원이나, 반일제 지원이나 종일제 지원이나, 급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소극적인 지원이나 등), 지원 액수(지역의 원비를 고려한 지원이나 전국의 동일지원이나, 공사립 동일액수지원이나 차등지원이나 등) 등에 대한 체제 정비가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한편 통합을 위한 재정 부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좀 더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로서, 현재 서로 다른 재정의 근원 즉,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교부금제도와 보육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서로 다른 재정 지원 단위를 단일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전자카드제 도입보다는 동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재원 통합방안 추진 등의 노력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재원 통합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중복 지원이 개선되고 형평에 맞는 지원이 수월해질 것이다. 현재와 같이 행정과 재정 모두가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에

서는 오늘 제안된 전자카드제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보육비지원을 위한 전자바우처제의 체제를 같이 하는 것도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두 가지 체제를 각각 만들기 위한 국가 재정의 이중적 소요가 예상되는 것이 본 토론자만의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지급 수단만을 카드식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체제 개편 부분

교육개방화 시대가 도래하였고, 학부모와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에 수요자 중심 교육과 기관 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일면 타당하다. 투자 대비효과가 미미하고 수요자의 만족도가 낮은 곳에 공공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교육기관에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 있다(Clive, 2002; Gill, Timpane, Ross, & Brewer, 2001).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현장에 적합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기관 간 경쟁과 수요자의 선택이 가능하려면 적정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제도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의 확보와 제도를 총괄, 감독하는 전담 기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공교육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학자들과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유한옥, 2005, 2006, Steuerle et al., 2000). 한 예로 영국의 경우 질적인 교육과 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부재와 불충분한 바우처 금액으로 인해 교육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학부모의 추가비용 지출이 과다하게 나타남으로써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공·사립유치원 간 바우처 상환방법의 상이함 때문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또한 계층과 사회적 이동사이의 연계성을 타파하는데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Gorard & Taylor, 2002).

이를 볼 때, 현재 유아교육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보편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의 방향이 섞여있는(현재 법적 유아교육의 대상이 만 3세~5세이지만, 3~5세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선택지원이 아니라 5세부터 아래로 연령 하향화 하는 방식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카드제 도입으로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교육비 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추정해 볼 때, 토론자의 소견으로는 저소득층 유아들의 경우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토론자는 다시금 수요자 중심이나 선택권 확대의 문제는 전자카드제도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다기보다는 교육비 지원액수와 지원 범위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

만일 수요자 중심과 부모의 선택권 강화가 이번 정부 정책의 중심 방향이며 이것이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면, 현재와 같은 보편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의 혼합방식이 아니라 보다 확실한 선택적 지원과 적극적 지원의 방향으로 지원체제의 맥을 잡아야 한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모든 교육비 전체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동일한 액수를 지원해주지만 그 액수가 유치원의 경우 반일제기준이며 보육시설은 종일제 기준으로서, 유치원을 선택할 경우 종일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종일제를 원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유치원을 선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수요자 중심 정책과 경쟁, 자율을 지향하는 정책은 반드시 공공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II. 도입 목표 및 전자 카드제 세 가지 안에 대한 논의

1. 목표 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적 재원을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의 4가지에 기반을 두고 활용하고자 하는 체제 정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단, 책임성 부분에서 결과 지향적 시장책임이라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나 모든 책임을 기관에 두는 방식이라면 그 부분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목표는 카드제가 아니라 전산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하기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투명성 부분은 카드제 도입이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성이 있을 수 있으나 카드 결제 없이 전산정보시스템 구축만으로도 부정사용이나 이중 청구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특히 공정성 부분의 목표는 카드제보다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자카드제가 아니라 전산시스템구축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 교육청별로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일부 이루어져 있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구축비용과 관리비용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2. 제안된 3가지 안에 대한 부분

전자카드 유형 중 1안과 2안은 발제자의 원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단점이 많다. 특히 1안의 신용카드 거래방식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치하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저소득층 중심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방식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통제도 어렵다. 더구나 수수료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일은 유아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세 가지안 중에서는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카드에서 개인 인증기능만 가능하게 하고 결제한 유치원에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추가비용이 들지 않고, 현재의 목시적 지원 방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이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정보 전산 시스템의 구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왜 ‘전자카드’여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약하다. 전용카드의 경우 아무리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해도 단말기 구입 및 설치에 따른 비용이나 카드 제작비가 들 것이다. 특히 전체 유아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대상 유아가 적은 유치원도 있는데 모두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전용카드라 할지라도 대상 유아의 정보가 카드회사에 넘겨질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3. 선택 이전에 교육비 지원의 정책방향의 명료화 및 합의 필요

3안 또한 무엇보다 현재의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목표에 적합한 지급 유형으로의 전환인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본 토론자는 현재와 같은 목시적 바우처가 적절하고 전자카드제와 같은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보다는 그 이전에 현재의 교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비 지급 방식에서 복지적 측면이 강한 단계에서는 목시적 바우처를 사용하지만, 선

택적 측면이 증가하면 명시적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김진, 2007),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 바우처의 유형이 시장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바우처 유형이,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유형과 환불 유형이 높다(정광호, 2007)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묵시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고영미, 2007; 백혜리, 2008; 문춘옥, 2008)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 목적은 교육출발점 평등 구현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전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의 교육비 지원정책 목적은 효율성보다는 복리 증진이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만일 전자카드제와 같이 명시적 유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전에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카드유형에 대한 논의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III. 유치원 전산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대한 논의

1.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대한 합의 필요

부모들에게 유치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안내해주어서 선택에 도움을 주는 체제 마련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어디까지의 정보를 부모에게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원고의 전산시스템 구축부분에서 주요 처리 정보로 제시된 유치원현황이나 시설현황, 건강 안전 현황 등에만 국한한다면, 부모의 유치원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모의 기관 선택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부모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한 체제에 불과하다.

2.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합의 필요

정보 공유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비밀 보장 원칙하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유아개인의 정보는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정보도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매우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3. 정보전산화 체제구축을 위한 담당인력 확보

정보전산화 체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교사가 교육비 업무나 기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는 각 기관별로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담당 인력의 확보나 교육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화 체제구축에서는 교육비 지원 대상 뿐 아니라 모든 유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전자 결제 시스템이나 NEIS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 효과를 기대하며,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보안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논의

1. 제안된 다섯 가지 추진 과제에 동의하며 토론회 및 공청회는 다양한 유아교육보육 관련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 교수, 행정가, 교원 뿐 아니라 학부모가 카드제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요즘과 같이 맞벌이가 많은 경우 학부모가 일일이 기관에 와서 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선호할지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카드제보다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전산정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협의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3. 공 사립에 따른 지원 항목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교육비 지원체제 확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비 지원은 유아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느냐, 사립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실정이다(만 5세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2008년 현재 만 5세아의 경우 월 55,000원까지 지원, 사립 유치원은 167,000원까지 지원). 한편 급식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교육비와 차액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 도에 따라 급식비 지원액이 서로 다른 실정이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지원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방식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가면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조부경, 2007a,b). 또한 원아 당 교육비 전체를 바우처로 지원한다면 지금과 같이 교재 교구비, 인건비 보조 등의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다(고영미, 2007).

따라서 명시적 형태의 지원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특히 이 같은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 및 금액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유아에게 지원하는 유아교육비를 모두 국·공립 유치원 처럼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를 포함한 순수 교육비만 동일하게 유아에게 지원하고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제정비가 바람직하다.

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정책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안 일지라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분명한 가치와 철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영미(2008).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 유아교육학회 2008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333-347.
- 김진(2007).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5, 22-39.
- 문미옥(2006). 한국 미래를 위한 유아관련 학제 개편 방향. 유아교육연구. 26(5), 5-33.
- 문춘옥(2008). 토론: 전자바우처의 실행과 보육의 질, 보육비용지원 방식의 변화와 문제점 - 전자바우처 실행과제, 2006년 한국보육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5-65
- 백혜리(2008). 전자바우처의 실행과 보육의 질, 보육비용지원 방식의 변화와 문제점 - 전자바우처 실행과제, 2006년 한국보육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9-54.
- 송기창(2008).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재정 시스템. 한국유아교육학회 2008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53-73
- 이일주(2008).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방안. 한국유아교육학회 2008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유한옥(2005). 바우처 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한옥(2006).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시리즈 2006-02.
- 정광호(2007).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1), 61-109.
- 조부경(2007a). 우리나라 유아무상교육·보육 정책의 발전방향.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 정책대토론회. 포럼 푸른 한국 제 21차 세미나 자료집. 144-179..
- 조부경(2007b). 유아교육 재원확보 및 배분정책의 방향. 국회의원 정봉주 정책자료집 14. 유아교육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27-42, 6월 21일. 서울: 정경련 회관.
- 조부경(2008). 유아교육보육 통합 일원화 방안. 부산 사립유치원연합회 연수자료집.

- 육아정책개발센터(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한국유아교육학회(2005-2006). 한국유아교육과 보육의 자리매김. 한국유아교육학회 2005, 2006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유아교육학회(2007). 한국 미래를 위한 유아관련 학제. 서울: 양서원
- 한국유아교육학회(2007).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정책연구보고서.
- Moss, P(2003). Re-forming the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in England, Scotland and Sweden. UNESCO policy brief on early childhood N° 13 Paris: UNESCO.
- Clive, B. (2002). The Prospects for education vouchers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71 969)
- Gill, B. P., Timpane, P. M., Ross, K. E., & Brewer, D. J. (2001). Rhetoric versus reality: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about vouchers and charter school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61 917)
- Gorard, S., & Taylor, C. (2002). Market Forces and Standards in Education: A Preliminary Consider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3(1), 6-18.
- Steuerle, C, E., Van D, O., George P., & Robert, D, R., (2000). Vouchers and the Provision of Publish Service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